비전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朝鮮日報

교육부 공식 발표, 수도권 통합 취업률 1위
졸업생 2천명이상, 6년연속 17-22년, 2024년
경복대학교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안내 (02)724-5114 구독·배달 080-900-0077 1920년 3월 5일 창간 105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음력 7월 3일 丙寅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Why & How

이재명·이시바, 美 관세·방위비 압박에 공감대 형성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쿄를 방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한일 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발표된 것은 17년 만으로, 그만큼 양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 압박’ 때문에 오랜만에 일치한 것이다.

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일 관계의 경전이 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해 발전적 관계를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다.

발표문에는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 산업 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등 5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양국은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수소,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한일 간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도 2회로 확대한다. 공동 발표문에는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숙고하고, 협력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A2면에 계속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도쿄=박상기 기자

연합뉴스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내놓은 발표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방조 혐의 적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54페이지 분량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호출했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개의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계엄에 반대했는데 방조했다는 혐의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종헌·양인성 기자 A12면에 계속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의제·합의 사항 아직 조율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24일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양국은 의제, 세부 일정, 합의 사항, 발표 형식 등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일정도 일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우리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합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순방 때 국내에 머물며 현안을 챙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으로 가는 것 자체도 전례가 없다.

앞서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지력 강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 제조업 부흥 지원, 대미 무역의 공정성·상호성 회복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를 출발하기 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지금 여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타이밍쯤 되면 (의제가)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전히 미국과 협의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발표 문안을 조율하는 일은 있지만 의제 같은 기본적 사항까지 막바지 협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김동하 기자 A3면에 계속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정청래 “역사적 의미 있는 큰일” 국힘 “경제 내란법… 헌소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귀족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의원 186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영 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되는 순간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유감”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했고 25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형 상장사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두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완 기자 기사 A4·5면

축하 폭죽 대신 드론 폭격… ‘전쟁 3년 반’ 우크라 독립기념일 르포 〈上〉 A8

八面鋒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한 여당 지도부 “역사적 의미” “역사적 순간”. 어떤 門이 열렸는지는 두고 봐야.

○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계엄 못 막은 2인자의 숙명? 현 여권에 맞선 괘씸죄?

○

러 외무 “푸틴·젤렌스키 만남 준비 전혀 안 돼.” 종전과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꿈, 동시에 멀어져 가나.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40903-중-175565호

척추관협착증 치료
추간공확장술

▶ 추간공에 미세하게 얽혀있는 인대들을 키트(식약처 제조품목허가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로 절제하여 추간공을 넓혀 치료
▶ 추간공을 넓힌 뒤 염증유발물질들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 추간공 깊숙이 숨어있는 유착과 염증까지도 키트로 정밀하게 치료
▶ 부분마취 후 15분 정도의 시술로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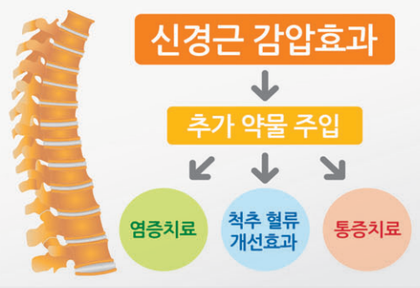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관: 뇌에서부터 나와 목뼈, 등뼈를 통과해 허리로 이어지는 신경다발의 통로
추간공: 신경다발에서 갈라진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구멍
척추관 노화와 강한 충격 ⇒ “염증 발생”(추간공을 막히게 하는 주범)
• 추간공에 염증 발생 → 신경이 붓고 주변 조직, 인대가 거미줄처럼 유착 → 유착이 심한 추간공은 혈관, 림프관, 자율신경까지도 누르고 조임 →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공간이 좁아져 척추관협착증으로 진행

척추관협착증 증상
• 엉덩이와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
• 허리에서 시작한 통증은 점점 다리로 내려가 발바닥까지 아픔
• 혈류가 막히면 저리고 시린 증상도 나타남

척추관협착증 비수술적 염증치료란?
• 요즘 척추질환 치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적용함
• 짧은 시술시간과 회복기간, 부분마취, 통증치료가 가능한 특징 때문임
척추관협착증의 염증치료
추간공에 숨어 있는 “유착과 염증유발물질”을 치료하는 것
척추관과 추간공을 막고 있는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면,
•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함 • 재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짐

추간공확장술로 어떻게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나요?
치료 방법
• 추간공 접근법을 통해 옆구리 방향에서 직접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키트를 사용
• 부분마취로 추간공에 미세하게 얽혀있는 인대들을 절제하여 인대 주변의 유착과 염증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혀줌
• 넓어진 추간공을 통해서 염증유발물질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치료 원리
기계적 요인: 추간공을 넓혀 신경 압박이 점차 풀리고 추간공을 지나가는 혈류가 개선되며 통증치료
생화학적 요인: 염증유발물질들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 추간공이 뚫렸는지 여부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 혈류가 원활히 돌고 저리고 시린 증상을 치료
• 추간공이 뚫린 상태에서 약물을 적절히 주입하면 염증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특 징
• 부분마취 하에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되는 시술이므로 조직손상과 상처가 적음
• 시술시간이 15분 정도로 짧아 고령,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 환자에게도 유효함
•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추간공확장술 시술과정

추간공확장술의 효과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
1. 척추관협착증 환자 2. 척추유착성(섬유성, 수술성) 질환 환자
3. 급성 및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 4.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
5. 고령 혹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

※ 이 시술은 염증치료 목적으로 시행함.
※ 감압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음.
※ 시술 후 출혈, 감염 및 요추신경근 손상이 있을 수 있음.

광혜병원
전화상담/안내 02-538-711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9(2호선 삼성역 2번 출구)